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목 차>

1. 금융회사의 해외상장법인 주식 투자시 주식
평가의견서 제출 요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양찬석
	담당부서 (과)	국제협력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893
	팀장	강성호		이메일	fsc0384@mail.go.kr

2021. 10. 29. 작성

정책책임자 국장 권대영(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회사의 해외상장법인 주식 투자시 주식 평가의견서 제출 요구								
	2.규제조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제1호 나목								
	3.위임법령	외국환거래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11.4 ~ 2021.11.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기관이 해외상장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 필요성이 낮음. ○ 따라서, (기존) 주식평가의견서제출 -> (개선)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면제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대상 기업의 신용, 법률, 경영상의 리스크 등 특별한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필요								
	7.규제내용	○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규제완화) - 해외직접투자 대상 중 상장된 법인의 경우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면제 - 건전성, 법률, 경영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유를 열거하여 제출의무를 최소화								
	8.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td><td>약 900개(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금융지주사 등)</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약 900개(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금융지주사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약 900개(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금융지주사 등)								
9.규제목표	해외상장법인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 원칙적 면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제출의무 부담 경감(감독 목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2년 주기 재검토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네거티브 리스트 : 원칙적 면제,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 부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해외직접투자)	제3조(해외직접투자)
④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u>금융기관</u> (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은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u>금융회사</u> (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단서 신설>	나. ----- ----- .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음 각 1)부터 3)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의 신고의무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 발생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시 현재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주식평가의견서를 해외상장법인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다만, 감독목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외상장법인 주식 취득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 면제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감독목적과 제출의무의 균형성 도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감독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식평가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요청사항 수용
금융감독원	감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	요청사항 수용

3. 규제 목표

-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감독권은 필요최소한 범위로 축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감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목적과 수단간 비례성 확보함과 동시에,
-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부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부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부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부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약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규정 적용 대상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기관 등은 중기에 미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의 예외없이 주식평가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출사유를 열거하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기능 제한적 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2년 단위 재검토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0	원칙적 면제,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의무 부여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서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수시보고사항으로서 해외 본점에 건전성, 법률, 경영리스크 등의 사유 발생시 보고토록 하고 있음.

<참고법령>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조세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

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삭제 <2016.7.28>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 해산의 결의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 위치 변경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피규제자(금융기관)는 예외없이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준수 가능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행정인력 필요성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투입 재정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정안 마련시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후 감독기관의 제출요구 사유 및 건수 등을 파악하여 규정의 실익 분석

3. 종합결론

- 해당 규정은 기존 규정 대비 그 의무 범위를 대폭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